

춤은 보고 즐기는 몸의 움직임만이 아닌 응축되었던 정신이 드러나는 하나의 의례이다. 삶의 참 의식이다.

지난 6월 9일 민주항쟁 20년을 기념하며 춤을 추었다. 그날의 춤 역시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춤판이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 역사를 맞이하는 역사에 대한 지극한 의례였다.

1987년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공공 열어붙은 겨울 1월, 박종철 물고문 사건이 터진다. 우리 모두를 정신까지도 숨까지도 열어붙게 만든 물고문 치사사건. 여기저기서 선·후배, 동지들의 각종 고문당한 이야기가 수련수련. 국악하고 무도한 그 사건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인간성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 행위들.

누가 누구를 무엇이 한 인간을 그토록 짓밟을 수 있는가. 나 역시 연습실도 안주할 곳도 마땅치 않던 그 시절. 모두 열어붙은 정국.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그럴수록 거만히 있는 것은 죽음이었다.

어떻게 풀 것인가. 그 겨울에 인간성이란 인간의 도덕성이란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 그 과정에서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



불자 세상보기

이 애 주
무용가 · 서울대 교수

깨달음으로 가는 '길담음'

은 어떻게 짚을 것인가. 우리들의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들만으로 충분히 채워진다. 상징적으로 모아진 사실적 이야기. 생명의 탄생, 자람, 꽃 피움, 죽음, 다시 태어남 등으로 생명의 일생으로 틀을 잡았다.

씨가 땅에 떨어져 물과 불로 발아되고 자라면서 꽃 되어 열매 맺고 일생을 마감하는 생명의 보편적 틀. 그러나 물과 불 기운이 넘칠 때 파괴되어 죽음으로 물고 가는 그 부당한 힘들. 저절로 한 마음을 하고 그 죽음이 거름되어 다시 피어나는 꽃. 결국은 생명의 일생이고, 사람 일생의 이

야기로 압축된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술로 승화시켜 풀어갈 것인가.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마침내 씨 · 물 · 불 · 꽃 등 생명의 구성요소로 압축되고 씨춤, 들춤, 불춤, 꽃춤으로 구체화되었다.

드디어 춤은 '바람맞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 춤은 연우무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펼쳐졌고 곧 시국춤, 한풀이춤 등으로 기사화되면서 큰 불길로 번져나갔다. 연세대 이현열 장례식장, 인천 공장마당, 거제도

대우조선소, 태백탄광, 홍제동 성당, 전국 여러 대학 등 끝없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춤은 처절함을 넘어선 죽음과 삶 그 자체였고, 절제된 시대정신의 표현이었다. 다음 아닌,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었다.

20년 후 그 바람맞이는 오늘날의 상생평화춤으로 되살아났다. 역사 속의 죽음이 태초의 인간의 정신으로서 현재의 정신으로 되살아났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리면서 그 영혼의 생명력은 우주정신, 본성으로 되살아났다. 한 빛, 한바람으로 되살아났다.

춤 한 걸음은 백 년, 천 년, 억겁 만년을 걷는 운회의 한 걸음이고, 한 번 휘둘리는 팔 사위 너울짐은 역사를 휘둘리는 한 사위이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삼진삼퇴(三進三退)가 이루어지고 너울 사위가 겹쳐지며 바람이 되고 태풍으로 몰아친다. 그 모두는 수축상응(手足相應)로 상생하여 태평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오늘의 상생평화춤이다.

1987년 바람맞이나, 2007년 상생평화춤이나 다음 아닌 존재 근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었다. 춤은 참나를 찾아가는 길담음이다. 춤은 깨달음에 이르는 정신수행이다.

불자의 눈

사찰 재정 '원칙' 정착되길

사찰과 돈을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 출세 간적인 공간 즉, 신명(수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사찰과 세속적 개념이 앞서서 재정문제를 동시에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사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어떤 형태든 활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사찰의 특수한 환경이 재정의 운용과 관련, 명쾌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춧돈으로 운영되는 사찰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다 보니 사찰의 재정 문제는 재가자들에게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찰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수행과 신명이라는 본래 기능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재정의 명쾌한 운용이 사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고 불자들의 시주문화가 합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찰 재정도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사찰의 재정 운용 문제는 큰절이나 작은 절이라는 외형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운용은 오해와 비리를 낳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찰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운용은 오해와 비리를 낳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찰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재정문제가 깨끗한 사찰은 뭐든지 발전적이라는 사실을 놓쳐선 안 된다. 조계종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회가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정이다. 이 위원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찰 재정 운영 방안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찰이 그 틀을 받아들여 '깨끗한 불교'가 되길 기대한다.

불교환경연대 '큰 그림' 환영

불교환경연대가 사산과 김포에 잇따라 지회를 창립한다. 환영할 일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그간 불교계 환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운동이 모두 성공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의 결핍이었다.

2001년 창립된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의 환경 수요의 지를 결집하는 거대기구다운 결집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래서 이번 사산과 김포지역의 지회 설립은 불교환경연대의 조직 확대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회의 명칭을 '사산불교환경연대' '김포불교환경연대' 형식으로 한 것도 지회가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부와 시군구 단위의 지회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각 지역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 하는 것이 불교환경연대의 '큰 그림'이다.

또 불교환경연대는 연초에 초록봉사단을 설립해 불교환경자원봉사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었다. 지부 지회의 꾸준한 확대와 환경자원봉사단의 가동을 축으로 불교계의 환경운동을 견인하겠다는 의지였다. 이 같은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승단과 재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불자들의 '참살이'를 이끌어가는 불교환경운동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6. 사립학교법 뿌리 내려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사학, 민주·합리적 운영 솔선수범 해야"

2005년 12월 9일 국민적 관심 속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1년 반이 지나도록 보수 정치권과 종교계의 반발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사학법은 1990년 3월 거대여당이던 민주당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 평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20개 법안과 함께 일괄 통과시킨, 그 전보다 오히려 개악된 법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사학법은 15년간이나 싸워서 얻어낸 국민주권 되찾기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마디로 '부패와 전횡'이다. 교육은 돈만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과 공공성이 부족한 경우,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신 개인사업 하듯 친족들의 일자리나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쉽다.

그 결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온전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뻔하다. 10여 년 전 사회문제화 되었던 서울 상문고 사태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호 '두사부일체'에서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 죄 없는 학생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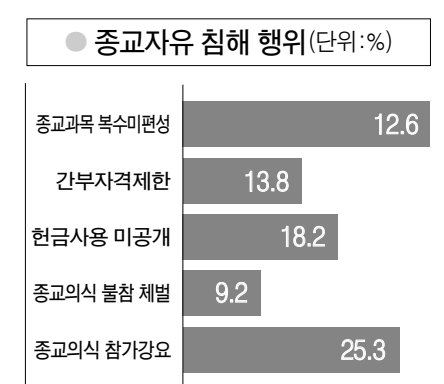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 사학법의 핵심 쟁점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 두게 되어 있는

'개방형 이사제'라고 할 수 있다. 사학재단들이 이 제도가 '사유재산권'과 '학원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공공이익'이 곧 '공공소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리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출연 재산은 더 이상 그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사회의 공공소유도 아닌 그 목적을 위한 공익법인의 소유일 뿐이다. 한국사학법연합회의 윤리강령에서도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유물 같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스스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이나 특정종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설학원 또는 신학교와는 달리, 사학의 재정 운영과 수업 내용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전제 아래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허가하여 갖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심지어 국민이 낸 세금, 즉 국가 예산으로 연간 수조 원씩 지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국의 사립학교 수는 1900여 개로서 전체 학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중·고등학교가 각각 23.5%, 46%, 전문대와 일반대학이 각각 90%, 79%이다. 사학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학의 건강성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종교정책연구원 종교사학 학생실태조사, 1996년>

사학비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종교계 사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종교사학은 근본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립학교 중 종교계 학교는 전체 사학의 약 25%인 480여 개이며, 이 가운데 개신교 학교는 360여 개로 종교사학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기독교가 공공연히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에서 종교과목은 타교목보다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수과목"이라며 사학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기독교 입장에서선 부패·비리보다 '종교강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Afterlife) featuring a large character '命' and text about the 12-point Buddhist path and the importance of the Three Jewels (San-so).

Advertisement for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Buddhism is Medicine) featuring a large character '佛' and text about the benefits of Buddhist teachings for health and well-being.